



사회적경제 씨뿌리기 그리고 퍼뜨리기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행복한 충남-

글 · 박상우 (사)충남시회경지네=우. 1 사무처장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가 오면 더 살만하고 행복해질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 1995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2만 달러의 시대로 진입한 것은 12년이 흐른 2007년 일본의 경우에는 1981년에 1만 달러를 넘어 2만, 3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각각 6년, 5년이 걸렸고, 미국은 1978년을 기점으로 각각 10년, 9년이 걸렸다. 대개 4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각각 9.6년, 5.6년이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낙관적으로는 2017년에 3만 달러, 2021년 4만 달러를, 비관적으로는 각각 2020년, 2032년쯤 도달할 것이라 추정할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로 상승하면 서민대중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더 나아지고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 이미 우리는 국민소득 24,000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때 보다 2배는 행복해졌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힘아까지, 할머니 때보다 훨씬 더 부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더 살만하고 행복해졌다고 쉽게 답하는 이가 많지 않다. 오히려 소득은 상승했는데 서민대중의 살림살이는 더 고단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다. 아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가 되어도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결국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 지수가 아니듯 소득을 많게 해서 행복해지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볼 시점이다.

극단의 시장경쟁 체제가 강요하는 욕망과 공포, 생활세계의 불안

최근 세모녀의 자살과 같은 사회방괴의 조짐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35분당 1명, 하루 평균 43명씩 인건 1만 6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국가 중 9년째 자살율 1위인 나라가 되었다. 인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는 늘어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불안과 실업이 일상이 되었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OECD 국가 중 가장 인 많이 하는 최장 근로시간의 노동자인 동시에, 그 노동 댓가는 20개국 중 15위에 그치고 있다.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 원 이하의 급여자도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중산층은 갈수록 사라지고, 175만 원 이하 소득자로 구분되는 빈곤층이 1990년 218만 명에서 2012년에 432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극단의 시장경쟁 체제와 양극화 문제는 생활세계 제반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 생존의 공포 속에서 1등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욕망은 경쟁으로 자라되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도 20조가 되었다. 외보도 스펀, 경쟁도구가 되어 성형시장 규모를 5조까지 넓혔고 성형인구로는 세계 1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대학까지 마치는데 2억 6,204만 원(교육비 37.3%, 9,766만 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아이 낳기가 두렵고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오래전부터 저출산 세계 1위다. 회안하게도 해외입양 지속연수도 세계 1위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키운 아이들이 정작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청년 상당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없으니 또다시 돈을 들어 대학원에 진학한다. 비싼 등록금 바뀐을 위해 사채의 늪에 빠져 술집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어렵사리 취업한 청년들은 사회 첫 걸음부터 학자금 대출 갚기에 고단하다. 올해초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 2명 중 1명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인체한 경현(51.3%)이 있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어빈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 역시 3년째 꼴찌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할 권리가 유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00세 시대를 맞은 대책없는 노후 역시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은퇴후 크루즈 여행도 꿈꿔보지만 할 일없는 30년이 앞서 두렵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80%는 겨우 아파트 한 채의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생활을 지켜나갈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소득은 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316조. 2가구 중 1가구가 십세마련 대출을 한 셈인데 57% 이상이 빚 갚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2년 1회 이상 연체한 경우가 18%에 이른다. 가계부채 잔액도 1,000조에 육박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개 창업후 3년 이내에 2명 중 1명꼴로 휴·폐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빚 부담금액은 7,786만 원이다. 급여소득자에 비해 5,000만 원 가량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 중 30% 정도는 22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자에 속한다.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1%를 위해 99%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

어느새 '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주격차, 생활환경의 격차는 공동체의 해체와 불신의 뿌리가 된지 오래다. 당연히 누구나 화폐로 생활불안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폭증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생존의 근본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또 과잉상태의 수도권도, 빈사 상태의 지방도 모두가 불행하다. 특히 충남과 같은 농업·농촌지역의 낙후는 멀지않아 마을의 존립과 지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자본도 취약한 지라 삶의 질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 남의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고,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밤에 혼자 걸으면 불안하고, 부패해서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는 화석연료의 고갈, 에너지 자원의 위기, 심각한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식량 위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 아이, 우리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 자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말 '지속불가능한 사회'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출현과 대중의 저항

이른바 위기의 시대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세계의 불안과 사회양극화, 생태위기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성장개발시대와 같이 열심히 일하면 신분 상승까지 가능했던,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다. 이미 1%의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강자를 제외하고는 99%의 경제적 약자나 중산층, 서민대중의 고통과 궁핍을 피할 길 없는 힘겹고 고달픈 구조, 즉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이러한 구조에 맞서 싸울 역량도 힘도 없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다행히도 마치 숙명처럼 여기던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책기조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출현과 대중의 저항이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최근 철도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저항, 젊은 세대들의 '안녕하십니까' 신드롬, 의료 민영화에 대한 주부들의 비판, 원전과 탈핵에 대한 관심, 생명평화와 공동체운동의 확산, 대기업의 지배력 확산에 대응하는 자영업자, SSM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저항, 그리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커뮤니티비즈니스·협동조합·마을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 등이 이외같은 흐름이다.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대안사회 전략으로 '협동과 자치', '지역화', '내발적발전', '사회적경제' 등의 이름으로 모색되고 실천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으로부터 확산된 '사회적경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대안경제 체제 혹은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사회적경제 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오랜 냉전체제의 레드캡플렉스 때문이었을까? 사회적경제의 '사회'가 사회주의의 '사회'로 오해받아 사회적경제를 운운하는 것조차 의심스러운 눈치와 오해받기가 일수였다. 물론 지금은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사회적경제가 보편적 용어가 되었고,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나 정책협의회를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무튼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학자들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띠었기 때문에 이론화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아마 이것이 일반대중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사회적경제는 '협동경제', '인대경제', '대안경제' 등 다양한 개념들로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 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중의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의 논리에만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사회성'이다. 둘째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1인 1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개개인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영의 민주성'으로 요약된다. 또하나의 특징은 사회적경제는 사업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업의 공익성'이라 말하고 싶다.

이같은 맥락 속에서 풀라니는 사회적경제를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태인은 인간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인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도록 조직된 경제형태라고 정의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가 인간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원리인 것처럼 수용하고 있지만, 역사상으로 나타난 순서로 본다면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보다 더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수립채취 시대에 가장 인악한 종의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협동의 사회를 만들었고, 이후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불일치로

생기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타났으며, 이어 인간 간의 관계를 시장가격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원격과 익명의 교류를 가능케 만든 시장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지역화, 내발전 발전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난해 말 박원순 시장은 '서울선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인간 존엄성의 회복,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글로벌 연대에 기반을 두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90년대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세계화'가 전혀 반대의 의미로서 99%가 아닌 1%만이 행복한 사회, 이것을 바꿔보자는 이들의 시작점을 시민선언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 내발전발전,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진도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혼재됨을 정리하자면 <지역화>란 마을과 지역이 주체적·자립적·대인적 존재로서, 그 마을과 지역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그 마을과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에 기여하는 순환과 공생의 경제구조와 풀뿌리 자치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바로 '내발전 발전'이다. 이 <내발전 발전>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의 성과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사람 중심, 순환과 공생,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내발전 발전은 지역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를 가장 중시한다. 즈음하여 제기된 문제는 이러한 내발전 발전과 지역화를 추진할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핵심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적경제'가 부각하게 된다. 즉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발전하게 되어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여 지역화를 추구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노동을 중시하고 연대와 협동의 원리에 의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역화의 추진주체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경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박진도는 오늘날의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모두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19세기말 자본주의 폐해에 대응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협동조합(생산자 또는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등 단일계층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과 1980~90년대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나타난 새로운 사회경제조직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에 대한 연대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대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등의 형태로 각 국별로 법적인 공식조직으로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경제, 계몽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충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있다. 정부나 여타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준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충남은 사회적경제를 고유의 사부로 정하고, 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한 최초의 지자체가 되었다. 사회적경제계를 전국 최초로 충남도 본청에 신설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중앙정부의 입법이 없음에도 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진력도 보였다. 이어 서울은 협동조합의 도시 서울 선언 등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시정 목표 설정을 통해 마을재생, 즉 마을 속에서 실천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주목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전국의 3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사회인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등이 발족되었고,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민주당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등이 구성·운영 중에 있다. 시민사회 역시 그동안 지자체들의 외부 의존적인 지역발전과 토건 중심의 개발 전략에 대한 혁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회적경제를 또다른 경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원적인 확장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민의식의 변화가 더이상 단순히 계몽주의적 관점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즉 소수에 의해 교육과 계몽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거나 대변운동 방식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앞서 길게 살펴보았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실천이고 행동이다. 즉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 주거, 노후, 노동분배 등 생활세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이 생장토록 민간 자조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원주의 협동사회경제, 충남 옹동의 협동촌 운동 등의 공통점이 그러하듯이, 오랜기간 구성원들이 협동과 자치에 대한 고민과 견의, 실험과 수정 등을 통해 만들어 낸 여전히 진행 중인 유기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의 몫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는 스스로 자멸로 가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협동해야 하는지? 왜 자치가 필요한지 진중히 고민하고 실천할 때만이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국가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완충선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날로별한 시민이 저항과 건설이라는 새로운 대안모델로서 사회적경제를 함께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서야 씨를 뿌렸지만 감부기만 부성하지 않으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몇몇 소수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위해 끊임없이 떠나없이 씨를 뿌려보자.